

기대 못 미친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에, 장관까지 홍보전

중소 지원기관·단체, 홍보 본격화 인당 월 13만원 최대 200만명 혜택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생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단체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접수를 시작한 후 지난 8일까지 신청 사업장은 약 600여 곳, 대상 근로자는 1200여 명인 것으로 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맨 오른쪽)은 11일 대전 중구 중앙지하도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업이 기대보다 저조한 셈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 보험료 지출 때문에 자금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57만원을 받는 노동자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월 13만7700원에서 1만7420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대상도 기존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등 최대 12만원까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월급 157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각종 경감 혜택을 받으면 월 13만3750원에서 이제 3만4480원까지 낮춰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저조하자 관계부처는 장관들이 직접 나서 영세 사업주들의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가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해 소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

을 펼쳤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장관도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노비즈협회 등도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주들의 신청 상황을 지켜본 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최신용 기자 bad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56명에 대한 삼정검 수여식을 마치고 육해공군 장성들과 거수경례를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정개특위 구성... 시기·내용 두고 '팽팽'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하며 2월 내 국민 개헌안 마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헌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여야간 강대강 대립구도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정개특위의 본격 가동을 주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전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개헌 로드맵 관련 버락치는 안된다고 했는데, 시간 맞다고 개헌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자중수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지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간이 없거나 색깔론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이미 제안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해 각 당의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개헌 특위와 여야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기를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작년 12월29일 국회가 많은 진통을 겪은 문제가, 민주당은 2월말 까지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으로 가기위한 술책을 가져 한국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文대통령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

미래 이익 위해 다양한 포용 전략 日 외교 염두해 위안부 문제 해결

무술년 벽두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킬 것은 지켜주고, 얻을 것은 얻기 위한 실리 외교, 소위 '관계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교의 특성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터라 과거는 묻어두고라도 미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포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대표적이다. 또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 시작되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이익 극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밤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피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돼 진정으로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양국간 2015년 당시의 공식합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한일 위안부 문제의 종지부를 찍는 지름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 일본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깊이 염두에 두고 위안부 문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UAE 의혹'도 UAE의 입장을 우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을 당시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실제 과정이 꽤 복잡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양국간 UAE는 외교에 관련한 비밀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여러건의 협정이나 MOU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상대국인 UAE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면서 "외교관계가 최대한 투명해야 하지만 (합의 당시)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대국의 외교 관행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대화가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에 이어 미북간 대화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향후 북미간 공조가 절실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승호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선언' 카운트다운 시작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예정됐던 의원총회 가능성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 대표측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통합 반발에 따른 탈당으로 통합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던 유승민 대표도 이날 이학재 의원의 간류

결정으로 '연쇄 탈당'에 제동이 걸리며 통합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양 정당 안팎에서는 2주 내로 안 대표와 유 대표가 공동으로 '통합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 전당원투표를 통해 75%의 당원들이 통합을 찬성한 것이고, 여러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 그 자체가 기대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나"라면서, "당무위원들이 당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안건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무위가 소집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 전날 중립시대 의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선(先) 사퇴, 후(後) 전당대회 정상개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그날 의원총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창원 기자